



INTERVIEW



전영옥

한국오리협회 사육분과위원장

지난해 오리사육 제한으로 전국의 오리농가가 세종 정부청사 앞 아스팔트를 점거했을 때 가장 큰 목소리로 오리농가들의 어려움을 부르짖었던 이가 있다.

전영옥 한국오리협회 사육분과위원장(부회장)은 오리업계에서는 여장부라는 말로는 부족한 대장부로 통한다. 최근 여성을 부각하는 단어들 이 많이 사라졌지만 오리업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전 부회장을 보고 있다면 그녀에게는 정말로 여장부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오리농가들의 어려움에는 누구보다 앞장 서 목소리를 높이고 오리농가들의 이픔에는 여성특유의 감성으로 눈물을 흘려주는 전 부회장을 전남 나주로 가서 직접 만나봤다.

오리농가 숙원해결 ‘여장부’

“AI가 터지기를 기다리는 농가는 없어요. AI는 오리 농가들에게 생업을 포기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사육제한, 모든 것을 제한당하는 느낌

“사육제한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한당하는 느낌이에요. 휴지기에 들어가서 4개월 이상 농장을 쉬는 것도 억울한데 계열업체에서 휴지기제 농가를 끌고 갈 수 없다고 병아리를 안 넣어준단 말입니다.”

전 부회장은 오리사육 제한 이후 나주와 영암의 오리농가들이 끝을 모르는 휴지기제에 들어갔다고 한탄했다.

“평창올림픽때문에 갑자기 사육제한에 들어가면서 농가도 계열업체도 준비가 안됐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오리가격도 높았고 때문에 두 번째 사육제한에 들어갈 때는 계열업체들도 비축량을 늘리며 준비를 했죠. 그런데 AI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오리 가격이 폭락하고 계열업체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오리농가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오리 사육제한에 들어간 농가는 연 2회에서 3회 정도 병아리를 입추하고 사육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받은 놀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 부회장은 오리 계열업체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들은 농가대로 어려운 상황이고 오리 계열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열업체는 사육제한이 들어가면 3개월 이상 생산을 멈춰야 하는데 그 동안은 운영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지속하다



전남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사업. 나주와 영암을 중심으로 특별방역기간에 농가 스스로 자율 방역을 하고 있다.

오리농가·계열업체
후방산업 종사자
모두가 피해자
|
농가위험성 평가 등
오리사육제한
전면 보완 필요



보니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육제한을 지켜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에 합당하게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만 강요하고 실질적인 산업 종사자들의 삶은 들여다 보지 않고 있는 거죠.”

특히 조명되지 않는 후방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전 부회장은 토론했다.

“사료운반차량 기사나, 오리 출하차량, 병아리 상하차반 관련자들, 제가 시냇말로 오리 퐁구녕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벌어 하루 살던 사람들에게 오리사육제한은 강제로 일을 쉬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별방역기간이면 사료차량 거점소독 필증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가던 길을 거꾸로 10km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필증을 받아서 다시 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름값들을 누가 보상해 줘니까.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 오리사육제한, 피해는 고스란히 오리업계

“10년 넘게 AI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AI 예방대책은 커녕 발생 원인조사 규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남은 것은 농가와 업체에 대한 규제뿐이에요. 그런데도 AI가 반복해서 발생했고 결국 오리사육을 제한해서 AI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오리농가와 오리계열업체들이 떠안은 겁니다.”

전 부회장은 실질적인 문제와 농가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오리사육제한의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보완 없이 오리사육 제한정책을 실시할 경우 지난해 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농가 총 쫓기대회가 재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면 다시 보완을 해야죠. 그 대로 되풀이 한다면 오리 농가는 물론 오리산업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또 똑같은 정책만 실시하겠다면 이번에는

오리 농가들이 세종청사 앞이 아니라 내부로 진입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오리가 AI 발생의 주범이고 열악한 오리축사가 AI 발생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정녕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악한 축사와 방역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등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전 부회장의 의견이다.

“오리농가는 결코 죄인이 아니에요. 안전하고 몸에 좋은 오리고기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생업이기에 계속 오리를 사육해 나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부도 그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해요.”

》 사육제한, 장기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사육제한제도가 밀집사육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육시설 분산정책은 시행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매년 휴지기 보상금으로, 앞으로 추가지급 해야 할 계열사 보전금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부회장은 이러한 근본적 해결책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설계도까지 보급해 축산농가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정책입니다. 그런데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들 밀집사육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AI 수평전파 차단효과는 반감될 겁니다. 그렇게 비용을 들이고서도 또 사육제한제도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답답합니다.”

오리는 육계보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가 5~6배 가량 적어 그만큼 면적을 많이 차지하므로 축사를 더 넓게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전 부회장은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층으로 축사를 지으면 부지와 축사 면적이 반으로 줄어요.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이예요.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축사시설현대화한다고 내 남은 생애를 빗 속에서 허덕이느니 차라리 오리를 안 키우고 말지’ 하면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요.”



농가 스스로 구성한 자율방제단의 방제차량은 3년 째 지속적으로 나주와 영암 곳곳을 누비며 소독을 하고 있다.

자율방제단 구성 특별방역기간 농가 스스로 방역

》 전남지역 오리농가위해 발로뛰는 ‘열혈전사’

전남도는 오리농가 밀집 지역인 나주, 영암 등이 분포 사육제한제도 시행 지역이다. AI의 주요 발생지처럼 부각되고 있어 전 부회장은 안타깝지만 전남도 오리농가 차원에서도 지구책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자율방제단을 구성해서 나주, 영암을 중심으로 특별방역기간에 농가가 스스로 자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3년째 지속하고 있어요. 이렇듯 농가 스스로도 차단방역을 물론 지역 전체를 위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AI가 터지기를 기다리는 농가는 없어요. AI는 오리 농가들에게 자기 업을 포기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부회장이 전남지역의 지부장을 맡으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경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을 보자니 살림 잘하는 주부의 솜씨가 묻어난다.

“제가 오리 농가들을 위해 나선 것은 대표로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리산업을 위해 애써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오리농가들은 현재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역은 종사들의 정신자세와 실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방역국의 역할도 조금은 변화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강제와 규제 일변도이던 방역정책을 일선 종사자들이 스스로 차단하고 방역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당근과 교육과 격려로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오리협회 나주시 지부에서 오리고기 무료시식회 등 지역축제에 참여해 오리고기 소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